

● 지방대 혁신에 2200억 원 지원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사업단을 구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시작되어 모두 220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세부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이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135개교, 전문대 106개교 등 241개 대학이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규모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되어 연간 10억 원 이하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투입되며 사업에 대한 연차 및 중간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과 사업협약 해지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유형별로는 대형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산업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단마다 연간 30억~50억 원이 지원되고, 총지원액은 1064억 원이다. 중형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가 참여하며 사업단마다 10억~30억 원씩 모두 851억 원이 지원되고, 대학과 한 개

이상의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소형사업에는 한 사업단에 10억 원 미만씩 213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업에서 모두 70여 개의 사업단이 선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대학의 복수 참여가 가능해 참여 대학은 사업단 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말까지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 3월 말까지 사업공고와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단을 선정, 내년 4월부터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 교원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유지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교원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가산점 제도를 지방사범대 육성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교육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판단은 최고법원 판결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으며, 다

음 달 있을 2004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역가산점 범위 내의 점수차로 탈락하는 응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4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9천375명으로 집계되었다.

● 사립대 설립 규정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사립대 설립자금을 모두 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은 반드시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 추진자는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 학교설립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사립대 설립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하고 대학은 만들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로 '학교법인 이

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내년부터 개척되는 이사회부터 회의 종료 후 즉시 결과를 정리해 조서를 작성한 뒤 출석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재임용 탈락교수 구제 관련법 개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구(舊)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임용 탈락 교수 모임 등 교수측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제 범위 등을 둘러싸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이 추진되는 법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초안)'에서 기간임용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될 임용권자는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과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이 개정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교내 재심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구제 범위를 구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재임용 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1976년 이후 탈락자를 일괄 구제할 것을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이견에 따라 구제 신청 대상 교수 숫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320~33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교수모임측은 1천여 명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은 재임용 탈락자의 일괄 구제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1990년 4월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개인별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학생 기숙사 설립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경희대와 강원대, 신라대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신축 및 증축 비용으로 각각 10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 지원은 2001년 마련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방안'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신청을 한 전국 36개 4년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과 향후 발전계획 등을 평가해 3개 대학을 선정했다.

● 시간강사 퇴직금 지급 판정

대학의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혀 판결이 확정되면 주당 근무시간이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인 15시간에 못 미쳐 그동안 퇴직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다수 시간강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위, 2004년 교육예산 확정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지방대 육성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내년도 교육예산이 총 36개 사업 분야에 걸쳐 당초보다 3천5백64억3천2백만 원이 증액되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교육위는 12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

정, 의결했다.

이날 증액 합의된 주요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1천억 원이 새로 편성되어 일단 국·공립대 시간강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총선 선심용이란 지적 속에 논란을 빚었던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8백억 원을 증액하되, 사업 개시는 내년 5월 이후에 집행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 장애아 교육지원 3백2억 원, ▲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원 283억 원, ▲ 미발령교사 임용 연수비 2백70억 원, 서울대 등 국립대 이전 사업 1백41억 원, ▲ 국립대 시설 설비 추가 지원 70억9천2백만 원 등이 늘었다.

●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대통령 보고

2006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7~8개 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어 육성된다. 2005년부터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나 취업률 등 대학 선택 정보가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또 대학은 스스로 세계적 연구대, 지역 거점대,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따라 차

등 지원하게 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부총리는 참여정부의 대학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학 자율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제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을 세계적 연구대, 지역 거점대,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대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2006년부터 두뇌한국(BK) 21사업의 성과를 검토한 후 지원하며, 또 지방 거점대 육성방침에 따라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및 지방대 7~8개씩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간 통·폐합과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 사립대간 인수·합병 지원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가 설정되어 기준 미달 대학은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받고 2004년부터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특별재정지원을 받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공공부문 채용과 진급에서 (이공계 출신을) 할당하는 제도 등을 추진해나갈 것"

이라며,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전문분야별 벽을 허물어내는 제도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 고시 20% 지방대생 할당 추진

지방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법, 행정, 외무, 기술, 지방고시 채용 인원의 최대 20%를 지방대 출신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대에서 우수 학생을 추천 받아 정부부처, 기관 등에 인턴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방대생의 취업 증대를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법, 행정, 외무, 기술, 지방고시에서 12%인 지방대 출신 합격자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000명 내외인 사법시험 합격정원 중 지방대 출신 합격자는 최대 200명으로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나머지 행정고시(200~250명), 외무고시(30명), 기술고시(60명), 지방고시(20명)의 합격 총정원(1400명) 중 지방대 출신은 대략 280명으로까지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대에서 우수 학생 중심으로 3명씩 추천 받아 정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2~3년 계약의 인턴 취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심층면접이나 직무 능력평가시험을 치러 정식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마지막 학기 등록금 수강 학점 따라 내도록

정부는 내년 새학기부터 대학이 마지막 학기의 등록금을 학생이 수강하는 학점에 따라 받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2년제 이상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쪽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최근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8학기는 학생이 수업을 6학점 이하 수강하면 대학이 등록금의 3분의 2, 7학점 이상 들으면 지금까지처럼 전액을 받게 했다. 또 9학기부터는 18학점을 기준으로 수강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받게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9학기 이후 등록금 감면은 이

미 일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8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며, "여론 수렴을 더한 뒤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 열린우리당 '계약교수제'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 '2~3년 단위의 계약', '임금을 해당 학교와 정부가 분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교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1만 5천 명에 달하는 박사 학위 보유 시간강사들이 매년 계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임금도 상당수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도입취지를 밝혔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동의했으며 세부안 마련을 위해 다른 정당들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 편입학 6천 명 제한

2006학년도부터 지방대의 학

생 이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편입학 규모가 6천 명 정도 축소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했던 축소 규모 9천50명에 비해서는 3천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후기로 나뉘는 연 2회 실시되는 편입학을 전기에 한해 1회만 실시하고, 편입학 인원도 교수 확보율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2006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일반 편입학 3만6천1백99명, ▲학사 편입학 6천5백71명 등 4만2천7백70명이던 편입학 규모가 3만6천9백77명으로 5천7백93명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편입학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연쇄이동으로 지방대 공동화, 교육의 질 저하, 학사 운영 부실화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2005년 교육대 정원 증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1개 교육대학 가운데 부산교대 등 8개 대학의 2004학년도 입학 정원을 600명 늘리고, 광주교대 등 6개 대학에 대해 2년 동안 500명의 편입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교대는 부산교대 138명, 대구교대 59명, 광주교

대 60명, 춘천교대 83명, 청주교대 68명, 공주교대 59명, 전주교대 53명, 진주교대 80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의 입학정원은 5015명에서 5615명으로 늘어났다

● **학생부 CD 일괄배포 안 한다**

이번 200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40여만 명에 달하는 고3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을 저장한 대입전형용 CD가 각 대학에 배포되지 않는 대신 각 대학은 지원한 학생들의 정보만 제공받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부 마스터 CD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 등 전국 12곳에 비치한 뒤 각 대학측이 직접 방문, 해당대학 응시자 관련 자료만 열람한 뒤 이를 CD로 제작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범석 차관은 “대학당 지원자를 최대 2만 명으로 잡을 경우 CD 제작에 30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2~4일이면 오류 정정까지 마칠 수 있다.”면서 “모집규모가 큰 대학이 하루 정도 전행이 늦춰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입시 차질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정시모집 1개교 대학의 경우 서울·인천 소재 대

학만 23개교에 달해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센터를 집중 배정했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생부 CD제작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CD 배포방식의 변경은 학생부 CD의 일괄배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응시자 주민등록번호와 출신고교코드 등의 정보를 가지고 학술정보원이나 시·도 교육청 등 학생부 CD가 비치된 CD 제작 지원센터를 방문, 해당 대학 응시자에 대한 자료만 별도의 CD에 담아가 입학전형에 활용하게 된다.

1997년부터 대학측에 입시자료로 제공되기 시작한 학생부 CD에는 전국 고3 학생 전원의 학생부가 담겨 있어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CD를 대학이 4년간 관리하는 현행 방식 대신 신입생 선발 후 CD를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 **이공계 활성화 위해 2237억 투자**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내년에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에 따

르면 정부는 내년에 이공계 학생 장학금 지원, 미취업자 현장 연수 확대, 영재 교육 진흥 확대 등을 위해 올해보다 48.6%나 증가한 2237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우선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해외 학위 취득 지원금을 올해보다 416억 원이 늘어난 1301억 원으로 책정하고 수혜 인원을 1만 3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졸업 후 미취업자의 현장 연수 지원에는 올해보다 230억 원이 많은 671억 원을 지원, 올해의 3배에 가까운 9120명에게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4급 이상 기술직 임용 비율을 30%로 높이고 5급 신규 채용 때 기술직 비율을 2013년까지 5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발령 특별법안 국회교육위 통과**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미발추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회부되어 큰 변수가 없는 한 법률로 제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충돌로 장기간 표류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발추 특별법안=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은 2001년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를 결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 사범대 학생과 학부모 등은 이들의 교단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왔다.

◆법안의 주요내용 및 전망=이날 통과된 법안은 미발추 교사들에 대해 ▲임용시험 합격시 우선 임용, ▲부전공 과정 개설을 통해 지원자 연수 실시, ▲초등교원 희망자에 한해 교대 편입 정원의 50%를 선발, 졸업시 농어촌 교사로 발령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특별법안의 통과는 국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소수를 구제하고 농어촌 교사 부족난 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시 임용명부에 올랐던 미발령 교사가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미발추측은 3000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

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사범대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경제 여건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뒤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는 만학도들에게 재입학의 길이 아주 넓어질 전망이다. 또, 국내 및 외국 2개 대학 공동명의로 공동학위(joint degree) 수여가 허용되고 학·석사 통합과정도 법제화되어 대학별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여석(餘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모집단위 제한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영문학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되었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 빈 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 자리가 생겨

도 영문과 2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6천~7천 명이 매년 대학에 재입학하고 있으나 1천500명 가량의 희망자는 여석이 없어 학업을 끝내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이들에게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로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운영 분야 제한 및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각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4년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했다.